

변양균-신정아 스캔들 충격

충격에 빠진 청와대...盧대통령 진노

변양균 해명에만 의존 위기관리 시스템 구멍

청와대는 10일 신정아씨의 '가짜학위 파문' 수사과정에서 신씨 비호의혹을 받아왔던 변양균 정책실장이 그동안 해왔던 해명이 상당 부분 거짓으로 밝혀지자 큰 충격 속에 빠졌다.

청와대 비서실 직위상 비서실장에 이은 '남버투'의 고위직인 정책실장이 사건 스캔들에 연루돼 물러난 데다, 변 실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도덕성을 제1의 가치로 앞세운 참여정부에도 '오점'을 남기게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와대는 변 실장의 신씨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잇따른 언론보도에 대해, 변 실장의 해명만을 근거로 "무차별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까지 밝히면서 변 실장을 엄호해왔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위기대응 시스템'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노대통령 '진노'...전격 사표수리=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호주 시드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하자마자 민정수석실로부터 변 실장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원칙적으로 철저히 조사 내지 수사하고, 신분을 유지할 경우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사표를 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질 민정수석은 전했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즉석에서 변 실장의 사표 수리 방침을 밝힌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이 갖고 있는 폭발력이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변 실장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처음부터 사실을 말하지 않아서 결과적

으로 청와대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데 대해서 매우 화를 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변 실장이 그동안 '거짓말'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청와대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비친데 노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것.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뒤 내부 회의를 통해 변 실장의 사표 수리 건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비서실 '당혹, 난감'=청와대는 변 실장이 신씨와 빈번한 연락을 취한 것은 물론 지난 7월 대통령의 과테말라 방문 수행 중에도 친구를 통해 장운스님과 간접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끝내 '낙마'로 이어지자 깊은 당혹감과 빠져있다.

또 청와대가 그동안 사대 발생 후부터 일관되게 변 실장의 각종 의혹과 무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변 실장을 옹호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변 실장 개인의 스캔들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의 '스크린' 기능을 포함한 위기관리능력 문제 등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변 실장이 신정아씨가 동국대 교수로 채용되고, 광주비엔날레 감독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개입했거나, 신씨 학위위조 파문을 축소하려는데 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변 실장의 사표 수리는 논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파문의 진화가 아니라 확산으로 흐름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청와대 고만의 값이 높아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연합뉴스



신정아씨 가짜 학위 사건을 수사중인 구본민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5일 오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신씨가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변 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연합뉴스

노골적인 연애편지 100여통 주고받아

변양균-신정아 어떤 사이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사진 왼쪽)이 검찰의 신정아씨 '가짜 박사학위 파문'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의 해명과는 달리 신씨와 빈번한 연락을 주고 받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 청와대 발표를 통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 등은 10일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변 실장이 지난 수년간 신정아씨와 수십 통의 노골적인 연애 편지 성격의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한 관계자는 "변 실장이 신씨와 100통 가까운 수십통의 이메일을 주고받았으며 거의 대부분이 연정(戀情)의 내용"이라며 "그 중에는 노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주 신씨의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에서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확보해 분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포괄적으로 '친한



'사이' 또는 '부적절한 관계'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런 노골적인 내용의 연애편지를 일컫는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변 실장은 신씨와 예일대 선배배 관계로 수년전부터 잘 아는 사이로, 빈번한 연락이 있었다"고 밝혔다. 변양균 실장은 예일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변 실장은 그동안 "신씨를 잘 모른다" "장운 스님과 만나 신정아씨와 관련해 얘기한 기억이 없다"고 해명하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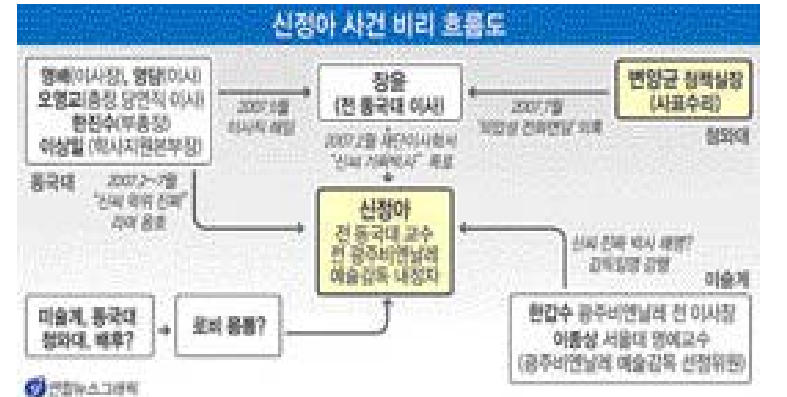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변양균은 누구 참여정부 들어 승승장구한 엘리트 관료

신정아씨 '가짜 학위 스캔들' 파문에 연루된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 들어 승승장구한 대표적인 엘리트 관료이다.

변 실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옛 경제기획원과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업무를 꾸준히 해온 예산 전문가였지만 부처 내에서는 잘 나가는 '주류'는 아니었다고 한다. 기획예산처 국장이던

2001년 민주당에 파견돼 당시 정책위 의장이었던 이혜찬 전 총리를 보좌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변 실장은 지난 2005년 1월 기획예산처 장관에 오른 데 이어 2006년 7월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됐다. 그가 맡고 있는 정책실장은 '경제·사회정책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다. /연합뉴스



"신씨 혐의 관련자 전원 소환 통보"

검찰, 이번주 중 참고인 조사 모두 끝낼 듯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가짜 박사학위 파문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10일 핵심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을 이날 중 통보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의 혐의와 관련된 이들에 대해 이날 중으로 전원 참고인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소환 일정을 이들과 조율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씨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된 주요 참고인은 장운 스님,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 재단 이사장 등이다.

검찰은 이들 참고인을 최대한 빨리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만큼 이들은 이르면 이번주 중에 조사를 모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출석요구에 줄곧 불응해온 장운 스님은 최근 대리인을 통한 인터뷰에서 검찰이 조사할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나 뒤에 수사에 협조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기삼 전 총장과 한갑수 전 이사장은 검찰과 연락이 닿고 있는 상태로 신씨의 교원임용 과정과 비엔날레 감독 선임 경위를 묻고자 하는 출석 요구를 불필요하게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한 전 이사장 또한 신씨를 광주비엔날레 감독에 선임하기 전에 신씨의 학력위조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국민들 또 한번 속았다"

한나라당은 10일 청와대 변양균 정책실장이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했던 허위학위 파문의 주인공 신정아씨와 검찰 수사과정에서 빈번하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국민들은 또 한 번 속았다"며 맹공에 나섰다.

박정준 공동대변인은 논평에서 "변 실장은 그 동안 신씨와의 관계를 강력 부인해왔고 심지어 대통령이 나서서 '소설갈다'고 했고, 청와대 대변인은 법적 대응 운운하며 조기에 입막음을 시도했다"면서 "변 실장과 청와대는 모든 것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공직자로서 가장 나쁜 행태인 거짓말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순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사람이 청와대 핵심을 형성하고 있는데 누가 이 정권의 공직자와 청와대를 믿을 수 있느냐"며 "검찰은 국민들의 분노를 헤아려 청와대에만 진실을 보고할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먼저 소상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범여 "청와대 국민앞에 사과하라"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학력위조 파문 당사자인 신정아씨와 연루된 의혹이 드러나 사퇴한 것과 관련, 범여권 제정당은 청와대의 사과와 함께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은 신씨 사건을 더욱 엄정히 수사하고 변씨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당초 노무현 대통령은 신씨 사건에 대해 '소설 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고 '깜도 안되는 의혹이 촌춘다'고 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며 "청와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찰이 수사 중인 측근비리 사건 등에 더 이상 외압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신정아 모른다... 장운스님에 부탁 안했다더니...

변양균 실장의 '거짓말 행진'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그동안 신정아씨 '가짜학위' 비호 의혹에 대한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검찰의 신씨 압수수색 과정과 민정수석실 조사에 의해 밝혀지면서 도덕성에 치명적 오점을 남기게 됐다.

변 실장은 지난 8월24일 신씨의 가짜학위 의혹을 제기한 장운 스님에게 '압력성 회유'를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전호선 대변인을 통해 "신씨 문제로 개인적인 부탁도 없었고, 이 문제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특히 보도내용 중 '신씨의 가짜학위 문제를 처음 공론화한 뒤 3~4일쯤 지난 7월초 장운 스님에게 과테말라에서 국제전화로 걸었다'는 부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미술에 관심이 많아 전시회 등에서 신씨를 자연스럽게 알

게 났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연락도 부탁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변 실장은 그러면서 장운스님을 지난 5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 7월경 시나 모호텔에서 만나는 등 두번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 장운스님과 만난 자리에서 신씨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성진 법무장관이 9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알린 내용은 사실은 그동안 변 실장이 해온 해명이 상당부분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정 장관은 "변 실장이 신정아씨와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이 신씨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밝혀졌다"면서 "이에 따라 변 실장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왔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실은 정 장관으로부터 변 실장에 관한 메시지를 받은 뒤 변 실장을 만나 이 같은 사실을 추궁했으며, 변 실장이 그동안 해명해온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점을 밝혀냈다. /연합뉴스

A large advertisement for a real estate agency,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The ad includes a large graphic of a mountain landscape and several columns of text listing different types of properties and their prices.